인수위 첫 간사회의… 정권인수 작업 착수

내달까지 정부 조직개편 완료

1월말 조각…민생경제 등 8대 과제 선정

문서 보존·인수위 요청 자료 협조 요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27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당선자측은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전까지 인수위 활동을 통해 민생 경제와 교육 문제 등 향후 집권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측은 특히 새 정부 출범전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기 위해 내년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최단 시간 내에 개편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1월 말 조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개정)은 최단 시간 내에 완결해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1세기 한국과 국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사회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인수위는 공무원의 안정적 복무와 봉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 "학자나 전문가들에 따라 정부개편에 관해 5개 정도의 보고서들이 있다"면서 "공무원 수의 급속한 조정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일정 부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방안 ▲부동산 안정대책 ▲부패척결 ▲청년실업 해소 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을 8대 어젠다로 선정하고 향후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은 2개월여의 임기 중 현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문서 등에 대한 보존 협조도 요청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일하게 되는 고급 공무원 인사는 현 정부에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난 각종 행위나 문서에 대해 문서 보존과 앞으로 인수위가 요구할 자료에 대한 충실한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연말까지 분야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하는 한편 오는 29일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가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경숙 인수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속개된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한 슬림화… 20% 줄여라"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 조직 축소 지시

"최대한 슬림화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조직과 인원을 줄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최대한 단출하게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27일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 "이 당선자가 16대 인수위에 비해 조직을 20% 줄여 슬림화된 인수위를 구성토록 지시했다"면서 "인원도 줄이고 회의시간도 오전 8시30분으로 30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당선자가 인수위 사무실을 직접 둘러보던 중 목재로 된 인수위원들의 책상을 보고 '인수위원들의 책상이 너무 좋다'고 지적해 목재 책상을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철제 책상으로 긴급 교체했다"고 전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가급적 구내식당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등 '검소한 인수위 활동'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수위 회의는 전체회의와 간사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전체회의는 주 1회, 간사회의는 매일 오전 8시30분 개최된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간사회의는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주요 현안이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게 된다. /연합뉴스

인수위,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靑 수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 2월말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현정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조치로, 특히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이번에는 현 정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임기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경우 업무연속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택순 경찰청장이 내년 2월 9일,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내년 1월 24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관급인 김경섭 감사위원이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나 대선 이후 후임 인선이 중단된 상태이며, 역시 차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도 최근 임기가 종료돼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가운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우석 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끝나며, 예금보험공사 최장봉 사장의 임기는 내달 5일 종료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현정부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면서 "아울러 일부 부처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인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이명박 당선자측과 협의를 해 줄 것을 바란다는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현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년 2월 말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에 대한 인사 자제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폐지법안으로 압박하자" "문제 삼지 말고 무시하자"

한나라, 'BBK 특검법' 대응 고심

한나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법안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의 특검 폐지법안을 압박하자는 의견, 신당이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이 직접 나서 폐지 또는 개정 법안을 내자는 주장, 신당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무시전략으로 나가자는 주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BBK 특검법은 대한변협과 법무장관까지 위헌성을 지적한 반(反)헌법적인 다수당의 정치쿠데타"라며 "(신당은) 지금이라도 BBK 특검 폐지법을 발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도를 걷지 않는 정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특검 폐지법안 발의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권오을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된 이상 지켜보자"고 말했고, 이군현 의원도 "개인적으로 특검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위헌성은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은 "법률적 대응 방법과 정치적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문제를 자꾸 삼아 국면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좋겠다"면서 "무시하자"고 말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지도부에 위임해달라"면서 "여론을 수렴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헌·위법적인 지금의 특검법 폐지법안을 할 것인지 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유류세 인하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7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이번 국회는 시일이 촉박해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도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은 유류세 전반에 걸쳐 10%를 인하한다는 한나라당 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상황의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10%를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기업에 내년 투자확대 요청"

이명박 당선자 오늘 경제5단체장·총수와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경제5단체장 및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기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대선후 사실상 첫 경제행보인 이번 간담회에서 이 당선자는 취임 첫해인 내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차기정부가 추진하게 될 친기업정책을 '선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당선자는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2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과 함께 20대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당선자측에서는 강만수, 최경환 인수위 경제1,2분과위 간사 등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자신의 국정운영 제1목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기업 투자확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의 내년 투자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수백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 내부유보가 실물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그는 기업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되도록 없애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의 사모펀드 참여 확대, 노동 관련 법규 개정 등 대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